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2 호
보 고 연 월 일	2021. 6. 9. (제 11 차)

보
고
사
항

금융권 인허가·승인
심사중단제도 운영 실무지침(안)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1. 6. 9.

1. 보고주문

「금융권 인허가·승인 심사중단제도 운영 실무지침(안)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.

2. 보고이유

'21.5.6일 발표한 「금융권 인허가·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」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검토시 참고할 수 있는 제도운영 실무지침 마련

3. 주요골자

가. 기본 절차 규율

- (중단절차) 심사前 또는 심사기간內 발생한 사유로 심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심사기간內 금융위원회에 안전상정
- (재개절차)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

나. 중단·재개 여부 검토시 고려요인

- (기본원칙) 해당 중단사유가 인허가·승인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(중대성), 중단사유 발생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할 것(명백성)
- (중단여부) 형사절차는 검찰기소 이전 고발·수사단계까지,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의 조사단계까지 중단없이 심사 지속
- (재개여부) 진행중인 형사·행정절차상 특정절차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거나 중단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재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

라. 기타 : 없음

<별지>

**금융업 인허가 · 승인
심사중단제도 운영 실무지침(안)**

2021. 6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I . 제도 개선방안

※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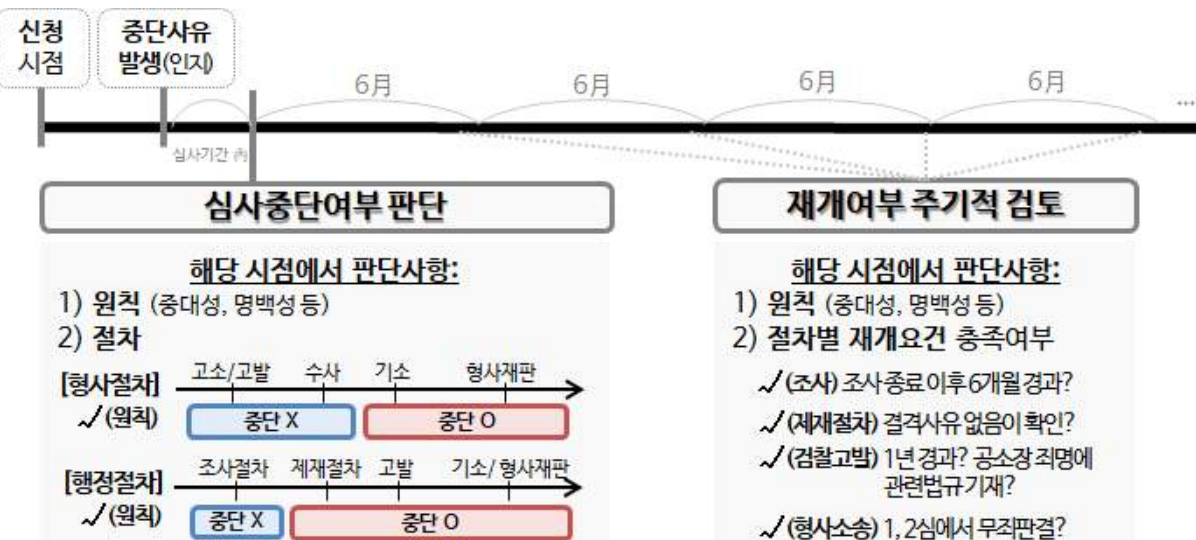
◇ 중단제도의 골격 자체는 유지*하되,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간 균형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문제점 일부개선

* 결정의 반복 등으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유지 필요

- (1) 중단요건 세분화 · 구체화 ☞ 신청인의 권익침해 최소화
- (2) 심사중단件的 재개절차 명확화 ☞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
- (3) 쉼업권에 제도도입 ☞ 업권간 형평성 제고

※ 개선사항

구분	현 행	개 선
(1) 중단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송·조사·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(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) - 중단여부 판단을 위한 「실무지침」不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송·조사·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,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* (원칙) 중대성, 명백성 등 (절차) 조사/제재/검찰고발/기소/재판 등 - 중단요건 관련 「실무지침」 마련
(2) 재개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형화된 재개절차不在 - 금융위 재량판단으로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每6月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-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(재개요건未충족시에도 중단 지속여부 판단)
(3) 적용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허가 - 일부 업권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험, 여전, 지주사 제외 ▶ 대주주 변경승인 - 쉼업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허가/대주주 변경승인 모두 쉼업권*에 적용 * 보험, 여전, 지주사도 제도도입



II. 제도 운영 실무지침(안)

※ 본 실무지침(안)은 금융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중단 및 재개여부 결정을 위해 마련한 내부규정이며,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심사 중단·재개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

1. 기본 절차 규율

□ **[중단절차]** 심사前* 또는 심사기간內 발생한 사유로 심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심사기간內 금융위원회에 안전상정

* 심사前에 이미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, 접수 이후 금융위에 "심사중단 안전" 상정

○ 금융위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 여부 의결

○ 다만,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결정의 적시성*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금융위원회에 상정

* 증선위·금융위에 안전 상정시 총 4단계(증선위 사전간담회, 금융위 소위 포함)를 거쳐야 하며, 최종 판단시점으로부터 최소 3주전에 보고사항이 확정되어야 하여 he업권 대비 적시성↓

(참고)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진행 상황 월간보고

○ "금투업 인가등의 심사진행 상황" 및 "예상 심사종료 시점"을 매월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 (증선위 심의 절차 생략)

□ **[재개절차]**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*

※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보고, 재개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는 의결안건으로 상정·보고

○ 검토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재개여부 검토 필요

○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진행경과 및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* 경우,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심사재개 여부 판단

* (예) 관계기관(공정위, 국세청, 검찰 등)에 진행경과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, 내부절차 진행 중으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는 경우 등

2. 중단 · 재개여부 검토시 고려요인

□ **[기본원칙]** 해당 중단사유가 인허가·승인여부 결정에 **중대한 영향**을 미치고(중대성), 중단사유 발생위험이 **명백히 현존할 것**(명백성)

○ **(중대성)** 중단사유가 실제 인허가·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허가 결과와 **명확하고 직접적 관련성**이 있을 것

※ 적용예

- ▶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A자산운용사의 대주주 B사가 **보험업법 위반으로 검찰기소** (공소장 죄명에 보험업법 기재) → **중대성 O**
- ▶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C자산운용사의 대주주 D씨가 **내기골프로 도박죄 혐의** (통상적으로 내기골프는 벌금형 이하만 해당) → **중대성 X**

○ **(명백성)** 중단사유가 발행할 위험이 **구체적으로 현존할 것**

※ 적용예

- ▶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A자산운용사의 대주주 B사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**다음달 1심 판결 선고예정** → **명백성 O**
- ▶ C자산운용사가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이후 **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착수** → **명백성 X**

○ **(기타 보충적 요건)** 그 외에도 사유발생이 임박한 등 사유의 긴급성이 인정되거나, 인허가·승인이 반복될 경우 **회복하기 어려운 손해***가 예상되는 등의 사유를 **보충적으로 고려**

* (대법원 2003무2)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**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**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유형, 무형의 손해**

※ 적용예

- ▶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C자산운용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지 **2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재절차未착수** → **긴급성 X**
- ▶ 금융위기로 **E금융회사가 부실화**되어 금융소비자 불안 가중, 임금체불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**인수·합병으로 대주주변경이 필요한 경우** → **긴급성 O**

□ **[중단여부]** 형사절차는 검찰기소 이전 고발·수사단계까지, 행정 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의 조사단계까지 중단없이 심사 지속

- (형사절차) 통상적 고발·수사단계에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고,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*·기소 시점부터 중단

* 도주,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, 압수수색 등

- (행정절차)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,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·제재,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

※ 심사중단 시점 (예시)			
구 분	심사중단 시점		중단 여부
① 형사절차 검찰/형사소송	▶ 고소·고발		중단 X
	▶ 수사	임의수사	
			강제수사
	▶ 검찰기소		
▶ 형사재판			
② 행정절차 금융위/금감원 국세청/공정위	▶ 검사·조사 절차	신청前 착수	중단 O
		신청後 착수	중단 X
	▶ 제재절차 착수		중단 O
	▶ 검찰 통보·고발		중단 O

□ **[재개여부]** 진행중인 형사·행정 절차상 특정절차가 무한정 지연 되고 있거나 중단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재개

- (형사절차) ①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가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, ②검찰기소 사유가 심사요건과 무관(공소장 죄명에 관련법령 未기재) 또는 ③법원 1심·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

- 다만,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서, 검찰기소가 임박한 경우*에 대비하여 검찰에 사전확인 필요(금융위 소관과)

* (예) 조만간 검찰기소가 예견되는 경우, 수사일로부터 1년 경과했더라도 심사중단 지속

- (행정절차) 검사종료일로부터 6개월*이 경과해도 제재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제재결과 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
* 현행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검사종료일로부터 180일 내의 기간(검사및제재규정§14⑤)

- 다만, 검사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서, 제재절차*가 임박한 경우에 대비하여 검사·조사기관에 사전확인(금융위 소관과)

* 제재절차 시작기준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기본적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제재조치안 사전통지를 시작점으로 통일

※ 심사재개 요건 (예시)		
구 분	심사중단 사유	재개 요건
① 형사절차 검찰/형사소송	▶ 강제수사	강제수사일로부터 1년 경과*해도未기소
	▶ 검찰기소	공소장(죄목)에 관련법령**未기재 ** (기관) 공정거래법, 조세범처벌법, 금융관련법령 (개인) + 금고이상의 실형 규정법령(형법, 특경가법 등)
	▶ 형사재판	1심, 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
② 행정절차 금융위/금감원 국세청/공정위	▶ 검사·조사 절차	검사종료일로부터 6월 경과*해도 제재절차未착수
	▶ 제재절차 착수	제재결과, 결정사유未발생
	▶ 검찰 통보·고발	검찰 통보/고발일로부터 1년 경과*해도未기소
	▶ 형사재판	1심, 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

* 심사재개에 앞서, 6월/1년 경과시점에 해당기관 입장 청취·확인

[별첨]

< 추후 요조치사항 >

- ▶ (업권별 관련규정 개정) 현행 심사중단제도 관련조항에 「每6개월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의무」 규정 추가
- ▶ (위임전결규정 개정) 「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」를 개정하여 현재 심사 중단·재개 여부 결정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정비 (자본시장법, 지배구조법)

→ 쉐업권 통일적으로 금융위 의결로써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결정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정책과	감독총괄국
연 락 처	02-2100-2833	02-3145-8004